'국민의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조

고 용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과장

1. 21세기 전환기—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개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와 인류문명의 대변혁이 전개될 전환기적 시점에서 국가 경제적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흔히 21세기는 지식·기술·정보 등 지적 자산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의 격동적 전환기라고 한다.

이미 국가간 경쟁양상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경쟁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국가 혁신시스템' 경쟁으로 변화하였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 각국들은 이에 대응하여 예전부터 노동력과 자본에 의한 생산성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응 방안으로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국가의 구조를 재편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는 가운데 특히,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혁을 주도하면서, 교육과 과학기술은 국가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요체로 부각되고 있다.

2. 현 위기상황의 원인과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열띤 논의와 숙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결론은 사회전반에 걸친 경쟁과 협력구조의 결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 연구인력과 자원의 유기적 접목이 미흡했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능력의 결여라는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가운데, 직업교육,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개발과 연계체제 구축 미흡으로 국가산업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고 결국 IMF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산업경제면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주력산업의 경우 양적으로는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취약한 가운데 외국의 기술도입, 대학 및 연구소와 괴리된 자체연구개발 등으로 고비용 생산구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면에서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괄목할 만한 산업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립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동협력 체제 미흡으로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성 확보가 곤란한 가운데 기술의 해외의존도는 심화되어 왔다. 그 한 예로 '97년 한 해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한 기술도입 로열티는 약 2조 원에 이르는데 반해, 동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 투입된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한 총 연구비는 5천억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초·중등교육에서는 일류대, 인기학과 진학 위주의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교육운영과 국민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고통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대학교육에서는 백화점식 학과 개설,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된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 경쟁과 평가가 결여된 연구·교수활동 등 열악한 질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3. 국가경쟁력의 의미

국가경쟁력은 한 국가의 문화, 경제, 사회질서와 의식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저변으로서 첨단의 지식기술과 효율적인 정보생산 및 유통 구조, 이를 통합한 국가적 혁신시스템의 구축 여부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우선적으로 민간기업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혁신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능력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OECD는 최근 21세기에 대응하여 국가전체를 국제경쟁력 있는 혁신체제로 개혁하는 데 그 핵심으로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상호연계를 통한 기술과 정보의 유통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교육개혁을 통해 산·학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partnership) 형성으로 현장성 있고 질 높은 교육·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간 교육개혁을 통해 고교의 다양화, 자격 및 직업훈련 체계의 재정립, 직업현장과 학교의 연계, 대학의 특성화 및 연구중심대학 등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나, 더 나아가 대학의 연구결과와 기술의 생산 및 시장에로의 파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인력육성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기술 경영 전문인력 양성과 컨설팅전문 조

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고등교육개혁의 시대적 필요성

첨단 기술에 의한 고부가가치 상품보다는 중간 기술에 의한 저가상품 수출에 크게 의존했던 '80년대까지는,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미미했고, 또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던 소수의 고급기술 인력은 외국 대학 유학생으로 충원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굳이 부즈·앨런& 해밀턴 한국보고서(1997)에서의 지적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가의 가격경쟁력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경쟁력의 협공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은 더 이상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없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는 바로 '지식격차'로서, 한국에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독자적인 지식·기술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는 그동안의 수준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급증하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의 공급과 지식·기술 개발체제는 이미 한 나라의 경제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였다. 지식은 노동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21세기의 중추적인 생산요소라는 산업계의 새로운 인식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산학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전환기, 그리고 국가경제적 위기 선상에서 '고급인력과 지식의 창출기관인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독창적인 연구와 기술개발 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대학의 연구 역량이 조속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포함한 고등교육 분야 개혁은 우리나라가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개혁 과제로 대두하였다.

5.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기조

오늘날 세계적으로 매일 2만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5년 주기로 지식정보의 양이 배증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더 이상의 암기위주의 교육은 부적절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생산된 정보의 자율적인 활용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21세기에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견실한 교육체제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 아래,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두고 교육개혁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추진중이다. 이들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교육계와 산업계간, 학교·대학과 지역사회간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과 관련한 평가를 체계화하고, 재정투자의 방향은 교육여건 개선을 중

시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충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교육계와 산업계간, 학교·대학과 지역사회간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지식·기술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 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향후 21세기 지식기반의 무한경쟁 지구촌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엔진'(engine)으로서 경쟁력있는 고등교육체제 즉,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이 절실히 요청되며, 구체적으로 대학원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엮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등교육과 관련한 정책적인 기조로 삼고있다.

첫째, 학교장 추천제 등을 통한 무시험전형등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 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실현장에서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둘째, 연구에 중점을 둔 '대학원중심대학'과 학사과정의 교육에 중점을 둔 '학부중심대학'으로 체제를 개편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초·중등교육의 파행화와 고질적인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이었던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체제의 고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바탕 위에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근본으로의 회귀를 이루고자 한다.

셋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립대학은 기초순수학문 및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사립의 경우에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그 운영을 특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국가·사회적 요청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실업대책 및 경영 합리화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산학협동의 활성화 등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학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고등교육 부문에 경쟁과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입시 과정에서 무시험전형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방안으로서 학교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있는 학력평가자료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에서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학생선발 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인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의 혁신이 뒤따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중심의 열린교육을 중·고교까지 확산하고 독서를 필수 학습방법으로 하는 교실수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우선 국제적 비교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첨단 이·공계분야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여 독자적으로 지식·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정부는 대학의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학생 선발제도의 획기적 개혁과 대학

원 중심으로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전제 조건으로 경쟁과 평가과정을 통해 행·재정 지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국가적 연구역량 제고와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6.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 진학률이 46.1% ('98학년도)에 달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학생수 대비 234배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양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이러한 교육열이 국가재건 과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의 교육의 질이나 교육여건은 세계적 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연구를 지원하는 시설·설비가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여건이 불비되어 있으며, T.A., R.A., Full Scholarship 등의 장학금 제도도 미비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일제 학생도 많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일부 대학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들의 희망이나 산업계의 인력수요와 무관한 학과 조직과 교육과정, 특성화되지 못한 대학, 입학한 학생을 인재로 양성하기보다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는 데 더 관심이 있는 대학,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대학 입학경쟁의 과열, 대학 교원 인사와 사학 운영을 둘러싼 비리와 갈등 등 우리 고등교육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마다 유사한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개설하여 설치학과의 교육과정(curriculum)도 거의 유사하게 획일적이면서, 또한 경쟁과 평가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가운데 산업수요 등 외부 환경에 적응 능력이 부족한 경직된 구조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 외부여건은 IMF라는 상황에까지 와 있으며, 현 상태로서는 대학에 대하여 더 이상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 속에, 국내적으로도 대학 입학지원자가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당면하는 환경은 완전히 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간 각종 평가 및 이와 연계된 행·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진작하여 왔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7. '국민의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고등교육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의거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사업이며, 또 하나는 학사중심대학 육성사업이다. 이와 병행하여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대학조직 및 재정 등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영쇄신, 실용교육의 강화 및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현재의 경제난 극복과 향후 21세기 지식(정보·기술) 기반의 무한경쟁 지구촌 사회에 대비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엔진'으로서 경쟁력있는 고등교육체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가운

데, 더 이상 국내 학부수준의 경쟁은 무의미하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의 보유·육성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7개년에 걸친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추진중이다. 대학원중심대학 제도는 관련되는 몇몇 대학에 국한되는 사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대학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원중심대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은 교육만의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적 관심사이다.

대학원중심대학의 본질은 대학의 핵심 기능인 교육과 연구 중에서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운영 목표를 종전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대학의 기본성격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교육·행정 체제는 물론, 교육과정, 학생선발, 학사 및 장학제도, 산학협동, 인사, 재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방안을 신중하게 추진중이며, 연구중심대학의 수, 선정기준·방식 등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첨단 공학분야의 대학원과 연구소를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research park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과학기술 엘리트를 집중지원·육성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과학기술분야 등으로의 균형적 분산배치를 위하여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최근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대응하여 국가 전체를 국제경쟁력있는 혁신체제로 개혁하는데 그 핵심으로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상호연계를 통한 기술·정보의 유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수 등 역량을 학사과정 교육중심에서 대학원과정의 연구중심으로 집중시키고, 특별회계 설치법령 등의 제도 개선 및 외국인을 포함한 교수·Post-doc T/O 등 연구전담인력 증원, 대학원생 기숙사·장학금 확대 등으로 대학원 사업에 강력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갈 계획이다. 또한 인근 지방대학 진학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국립대 교수연구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경쟁 인센티브제 도입 등 기타 여건조성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은 필연적으로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학사과정은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이수하고, 대학원 과정은 전국 단위에서 특성화된 대학원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고등교육 진로모형'이 필요하다. 소수의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과열된 대학입시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학사과정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제공하는 인근 대학에서 이수하여 취업에 대비하고, 평생 학문을 연구하거나 전문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 연구중심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육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특성화된 여건을 바탕으로 지역과 산업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학사과정 내실화 사업은 21세기 지구촌 지식

기반 사회 대비, 지역대학 학사과정의 일반 교육과정 중 영어 등 외국어 및 인터넷 등 정보처리 분야 교육강화로 실용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며, 고급기술인력의 80% 정도가 재직하고 있는 지역소재 대학을 발전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촉진 투자·기업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가운데, 대학의 지역소재 Techno Park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산학협동체계를 확충하여, 지역 공과대학의 특성화 등을 중심으로 실용전문교육의 내실화, 지역비교우위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육성 등으로 확산(Spin-Off)을 도모하며, 현재 '서울, 수도권 진학모형'을 '지역별 인근소재대학 진학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의 고졸 우수인재가 지역 인근대학에 진학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 학생선발제도 개선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장추천제 등 성적 외의 다양한 전형방법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에서는 자율적인 기준 및 절차에 의해 학생선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원에서는 본교 학사과정 졸업생의 비율은 일정부분 한정하고 전국 타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폭 넓은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며, 선발의 최우선적인 기준으로는 학사과정의 성적을 중시하여 재학시 면학 분위기를 진작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학 조직·재정 등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영쇄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바, 국립대학내(간) 구조조정을 통해 소규모 또는 유사 학과, 단과대학, 학부와 대학원간 통폐합 등 학사조직을 재편해 나가며, 나아가 전체대학간 조정의 가능성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책임경영제 정착,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등의 차원에서 국립대특별회계의 도입 추진으로 경영합리화를 촉진하며,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외 이사제, 외부감사제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끝으로, 고등교육의 실용교육 및 산학연계 강화 차원에서 대학 소재 지역 산업의 인력수급, 기술수준 등에 적합한 구조로 특성화하고 학부설치·교육연한 등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학협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천적 교육시스템으로 우리의 한정된 인적·물적·기술적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낙후된 기술·산업경쟁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우리가 추구하는 고등교육개혁의 직접적인 성과로서 대학의 주요 활동내용과 기대 효과는 궁극적으로 산학협동을 통해 발휘될 것이다.

8. 맺음말

끝으로, 일전에 보도된 바 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ain Science Moniter, '98. 4. 15)지에 실렸던 "한국이 IMF 관리체제라는 불행을 겪게된 원인은 암기식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회지도층이 국가경영에서 능력상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논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온 인류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이 산업사회적 특징에서 지식정보사회적 특징으로 전환하고, 가치관과 지식관이 근대사회적 기준에서 초근대사회적 기준으로 전환하며, 삶의 반경에 대한 관심이 지역중심의 공간에서 정보중심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선진 각국들은 지속적인 '교육개혁'과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국가의 구조를 재

편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육개혁은 절대적인 과업임을 재삼 확인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연구, 지식창출의 최일선에 서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대한다. 개혁은 구성원간의 합의와 리더십 그리고 전 국민의 동참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국가사회적 난국을 극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서 단순히 국내 대학간의 상대적 우월성에 자만하고 있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대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뇌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대학들은 소위 '명성'에 의한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진정 그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수준에 의해서 대학이 평가 받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명문대학'들이 국내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정책은 이런 취지에서 꼭 필요하다. 대학원중심대학 사업은 오늘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

고 용/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아이오와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교육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학술연구지원과장으로 재직중이다.